

# “반드시 성공시켜야” 시민사회각계 ‘한목소리’

## 광주형일자리 위기

[편집자주] 노동계가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되살리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으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의 현황과 갈등 원인, 전망과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각계에서 사업 '성공'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경제계와 교육계, 정치권 등이 잇따라 노동계 복귀를 호소하고 시민단체는 소통과 불신 해소를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지역 9개 산학연합회 구성된 광주산학연합회의 회장단은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광주시에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민정 협의의 테이블로 복귀하고 상호 적극 협의하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정상운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제한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들은 제1호 광주형일

광주산학연합회 회장단 · 광주 13개 직업계고 교장단 등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노동계 노사민정 복귀 촉구



광주산학연합회의 회장단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이탈로 최초위기에 놓인 광주형일자리 정상운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리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광주 13개 직업계고등학교 교장단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자는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광주시와 노동계 모두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성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연합회, 광주산인연합회 등 지역경제계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를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광주형 일자리가 고비용 저효율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투자 모델로 기대를 받은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광주시에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노동계가 대화의 장에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 산인연합회도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모델"이라며 "노동계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즉시 복귀하고, 광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중재' 역할에 나섰다.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은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와 광주시 등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YMCA, YWCA, 광주경실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시민원탁회의'는 4차 회담을 제안했다.

원탁회의는 노동계와 광주시의 입장을 듣고 소통의 부재와 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노동계와 광주시,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4차 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한 구체적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최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계가 나서면서 노동계가 이들의 바람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경석 기자

## GGM 완성차공장 건립도 '빨간불'

자기자본금 2100억원 올 상반기 소진...금융권 차입 '차질'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 이탈로 '광주형 일자리'가 위기에 처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 건립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60만4338㎡(18만3000평) 부지에 건물 연면적 10만9232㎡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은 12.5% 수준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장의 토대가 될 철골·구조물 설치와 도로포장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삐걱거리면서 공장 건립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장 공사비용이 문제다.

공장 건립 사업비는 총 5745억원이다. 자기자본금 2300억원과 금융권 비용 3454억원으로 총당한다.

자기자본금은 1대 주주인 광주시 483억원(21%), 2대 주주인 현대차 437억원(19%) 등 37개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1200억원과 공사비 등은 자기자본금으로 해결했다. 자기자본금은 올 상반기면 소진된다.

추가 공사를 위해선 나머지 345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자本是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을 전제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지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GGM이 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컨소시엄 등과 접촉하고 있지만 사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차입을 받으려면 서류 심사 등 행정 절차에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시간



3월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계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 1공구에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공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 촉박하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노동계는 지난 2일 원·하청 상생과 노사 책임 경영이 실종되는 등 노

동정책이 후퇴하고, 노정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 탈퇴를 선언했다.

GGM 주주들은 노동계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배수진을 쳤다. 주주들은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과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의 조치를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불참하면 다음 주주총회는 5월 중순쯤 열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사업 철회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이지만 노동계가 빠지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권 자금 차입에도 어려움이 생겨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